

<KMI 독도해양영토 정책세미나> 토론 정리

- 일시 및 장소 : 2012.04.09(월) 15:00, 서울역 4층 회의실
- 세미나 주제 :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벙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의 ITLOS 판결 내용과 한국에 대한 함의
- 참석자 : 약 40명

no.	소속	이름
1	KMI	윤진숙 본부장
2		이원갑 연구위원
3		박영길 박사
4		최영석 전문연구원
5		박지영 박사
6		최지현 박사
7		이창열 박사
8		장진희 연구원
9		김윤희 연구원
10		이현경 연구원
11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
12	아산정책연구원	신창훈 박사
13	부산대학교	박찬호 교수
14	외교통상부	유복근 과장
15	국토해양부	조경래 주무관
16	서울대학교	이근관 교수
17	동북아역사재단	김용환 박사
18	산하온연구소	김기순 소장
19	고려대학교	김현정 박사
20	외교통상부	김선표 심의관
21	해군 작전사령부	김동욱 대령
22	서강대학교	오병선 교수
23	경희대학교	김찬규 교수
24	서울대학교	백상미

□ 신창훈 박사(아산정책연구원)

- 200해리 이원에 대해 하층토만 경계획정을 한 것으로 선례가 없는 경계획정으로 law making 차원에서 의의가 있음
 - 일부 유럽학자들은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에 비견하기도 함
- ITLOS에 회부될 때 선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즉 경계획정 판례의 파편화(fragmentation)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3단계 경계획정 방법론을 수용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해소
- 회색지대 관련해서 ITLOS는 EEZ 관련 “due regard” 조항을 중시했으며, ICJ에 계류 중인 페루-칠레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이 중요한데, 향후 ICJ가 ITLOS 결정을 따를 것인지가 관심
- “자연적 연장”에 대한 해석을 주목할 필요
 -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당시 “자연적 연장” 개념은 관습법 밖에 존재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양법협약 제76조에 포함되어 있음
 - 이번 판결은 해양법협약 제76조를 문맥에 따라 해석할 때 “대륙변계”가 자연적 연장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 개념에 가장 부합
- cut off effect : 캐나다와 프랑스 간 중재사건과 비교하고, 볼포럼 재판관의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및 반대의견을 낸 판사들은 모두 그 동안 경계획정 관련 국제판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번 판결이 100% 만족스럽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
- 아쉬운 점은 판결이 CLCS의 역할과 대륙붕의 권원을 혼동했으며, CLCS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 판결문 제408항을 보면 협약 제76조 3항을 원용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CLCS의 절차와 관련된 것임
- 방위각 결정의 중요 고려요소는 해안의 오목성인데, ITLOS는 이 사건에서 오목성이 항상 관련 사정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오목성이 cut off effect를 상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본 사건에서 cut off effect가 최소로 되는 지점이 215도였음

□ 박찬호 교수(부산대)

- 이번 판결이 제소 이후 2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왔다는 점에서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점은 국가들이 재판소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될 것임
- 기존 판례들을 두루 인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법의 파편화 우려를 해소하였음
- 판결에서 관련 연안을 측정할 때 서로 마주보는 연안을 제외하였는데, 한중 경계획정시 발해만이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연안을 직선으로 설정한 것도 의의가 있음
- 200해리 이내의 지형적, 지질학적 요소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동중국해 경계획정 관련 중국 입장이 약화되고 일본 입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
 -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유리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것인데,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 만료될 예정이므로 대비책이 필요
- 판결은 CLCS와 재판소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CLCS가 고려할 것으로 생각
- 한중경계회담에서 대상 수역을 어디로 보는지 의문인데, 예컨대 북한 관련해서 서해경계 획정 수역을 어디로 볼 것인지 문제가 있음

□ 유복근 과장(외교부)

-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 독일, 일본, 방글라데시 등 6-7개국ی 환영성명을 발표
- 방글라데시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얻었다고 보고, cut off effect를 상쇄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변호인단의 충분한 연습과 로펌의 참여 결과로 봄
-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모두 오일 시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
- 이번 판결은 ICJ의 선례를 계승함으로써 EEZ 경계획정방법이 세팅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적 안정성과 소송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 200해리까지는 해저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경계선을 획정하였는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유리하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판단
- 회색지대는 한일 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향후 포럼 쇼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ITLOS가 ICJ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신속하게 재판하면 ICJ가 위촉될 것으로 생각

- 이번 판결을 통해 CLCS의 역할이 축소되고 ITLOS가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함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근관 교수(서울대)

- 두 명의 특별재판관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과 ICJ와 중재 판결들을 개방적으로 수용, 즉 기존 판례들과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의
- 판결이 의견상으로는 3단계 경계획정방법론이라는 *acquis judicare*를 존중하면서도 사실상으론 bi-sector 이론을 수용하는 전략적 절충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
- 200해리 이원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향후 혼합사건이 부탁되었을 때 ITLOS가 관할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방글라데시의 주장이 중국 측 주장과, 한국의 일본에 대한 주장과 유사한데, 이는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의 요지를 그대로 따르는 것
- 200해리 이원제에 대해서는 “대륙변계의 외측 한계”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

□ 김용환 박사(동북아역사재단)

- 소송 전략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
- 회색지대는 관할권 충돌 가능성이 발생하지만, ITLOS는 당사국간 문제로 넘김
- 독도/오키노토리시마 관련성 미미